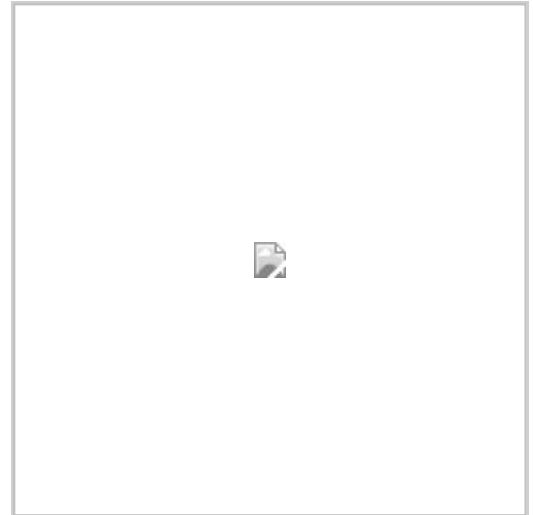


한일 양국 전문가 대화, "미래 세대에 밝은 한일관계 열어주자"

입력 : 2014.10.05 18:05 | 수정 : 2014.10.05 18:52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을 듣는 한일관계를 복원해보자는 목적의 양국 전문가 대화가 4일 서울에서 열렸다.

만 12시간 동안 진행된 ‘한일 지성의 열린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정치 대화의 단절이 경제협력과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치 대화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상호간 혐오(嫌惡)가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도 대부분이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형성될 동북아 다자질서 속에서 핵심 이익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차원의 전략대화를 빨리 복원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상황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두 나라가 현대 한일관계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과거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기 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밝은 한일관계를 열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양국간 관계에 달려 있기 보다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이 각기 자라는 학생들에게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일본이 일본 학생들에게 더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해 △냉전의 수혜자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과 분단까지 겪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제발전과 무혈 민주화를 이뤄내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국 측이 한국 학생들에게 더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지원이 한국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한국의 민주화에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었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정치·국민감정이라는 측면의 ‘체감(體感)관계’와 안보·경제라는 측면의 ‘실물(實物)관계’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며 “두 나라가 국제적 위상 상승의 기회를 동반해서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방을 연기할 경우 복합위기가 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로서 현안을 처리하고 관계를 수습한 다음 장기적 미래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동아시아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일지식인연대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일한관계에 참여하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감정적·정치적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대화와 공통의 이익 증진을 위한

대화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2궤도(軌道) 방식’을 제안하며 “일한관계를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간의 관계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갈등의 국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대결적·소모적 외교전이 전개됨에 따라 양국 갈등의 국제화가 진행중”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양비론이 증가하고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비전그룹의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대화에서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됐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측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 측 참석자들은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전시 동원’인 것은 맞지만 ‘강제 동원’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강제동원 인정,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할머니들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위안부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화는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및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